

고령화의 한국적 특수성과 일반성

배병우(국민일보 사회부 기자)

선진 산업 국가들의 최대 정책과제 중 하나인 고령화 문제가 우리나라에도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더욱이 세계 최저수준의 저 출산과 수명 연장으로 유례없이 빠른 우리 사회의 인구 고령화 속도는 정책담당자들을 당혹케 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국민들에게 ‘고령사회 임박’을 운운하는 언론보도와 정부 발표가 피부에 와 닿게 실감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불과 4~5년 전만 해도 예비군 훈련장 등에서 산아 제한을 위해 정관 수술을 권유하는 풍경을 보아 왔던 중장년에게 최근의 고령사회 논의는 갑작스러운 점이 없지 않다.

기자도 2년 전 처음 복지부를 취재하면서 한국장이 “얼마 안 가 우리 사회 전반의 빛깔은 회색이 될 것”이라며 고령화의 심각성을 토로하는 것을 듣고 의아하게 생각한 기억이 난다.

최근의 연금제도 개혁 방향을 둘러싼 논란과 연금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도 고령화에 대해 국

민들이 느끼는 ‘낯설음’과 관련이 있다.

또한 대다수 국민 의식에 아직도 박정희 시대 국가발전모델이 깊이 각인돼 있다는 점도 세대내, 세대간 배분 문제가 중요한 고령사회 국가모델을 낯설어 하는 요인일 것이다.

1. 한국적 특수성 감안을

지난해 복지부 내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설치를 계기로 고령사회에 대한 범정부적인 대응이 시작됐다. 참여정부 출범 때부터 최우선 정책 의제로 다뤄졌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없는 게 아니지만 적절한 정책 전환이라고 생각된다.

정부는 2010년까지 추진할 저출산고령화 종합대책을 마련했고 조만간 ‘저출산고령화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들 계획에는 일본과 유럽 등 OECD 국가들

이 추진해 온 노후소득보장체계와 노인요양대책 등이 '전범'처럼 인용되고 있는게 사실이다.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선진국들이 1970년대부터 인구 고령화에 직면해 대책을 마련해 왔다는 점에서 이들 국가의 경험은 소중한 선례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들이 큰 테두리에서는 유사하지만 국가별로 역사와 문화에 적합한 독특한 정책을 마련해 왔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할 것 같다.

우리나라의 경우 크게 두 가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일본 유럽 등의 선진국들이 제2차 세대대전 후 공적연금체계와 전 국민의료보험 등 완숙한 복지국가 기반을 갖춘 뒤 고령사회를 맞은 데 비해 우리는 아직 이러한 기반을 갖추지 못한 채 급속한 고령화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성장 위주 국가발전 모델에 여전히 익숙한 국민 의식과도 관련이 있다.

이에 따라 정책담당자들은 복지국가 모델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을 개선하는 한편 빠른 시일 내 고령사회에 적합한 사회 경제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는 이중의 부담을 지고 있다.

둘째, 경제 사회 전반의 양극화 심화가 고령화에 대한 대응을 더욱 어렵고 복잡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국민연금 혜택을 볼 수 없는 사각지대가 광범위한데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격차가 확대되면서 빈곤층이 양산되고 있고 이는 다시 국민연금 등 공적 보험체계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 고령자에 대한 고용차별 금지 등 고령화 시대 노동시장의 핵심 정책도 이러한 양극화가 완화되지 않는다면 시행

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2. 정책 우선순위 정해 자원 집중을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검토되고 있지만 한정된 재원과 자원을 감안할 때 사업별 우선순위 선정이 중요하다. 또 유사한 정책 수단이라도 정책효과에 대한 치밀한 검토를 거쳐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은퇴 이후 노후소득보장체계 수립은 두말 할 나위 없이 중요한 사안이다. 이와 관련, 국회로 넘어간 국민연금 개혁을 이른 시일내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도 사각지대 해소에 주안점을 둔 기초연금제를 들고 나왔지만 재정 소요가 엄청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대타협의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일정 기한 내 사각지대 해소 대책을 별도로 마련하는 조건부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우선 통과시키는 등의 타협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50세 이상 중고령자를 포함, 고령자들에 대한 차별과 배제 관행을 우선적으로 손질해야 한다.

이는 자녀 교육비 등 가계 지출이 가장 많은 시기인 50세 이상 고령자들이 조기에 일터에서 밀려나는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가 작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50세 이상 중고령자들이 직장에서 밀려난 후 갖는 직장은 비정규직이나 영세자영업종으로, 주변부 근로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절반을 넘는다.

'사오정', '오륙도' 등 조기퇴직 관행을 온존한 채 정부가 추진하는 고령사회 대책이 효과를 보기는 힘들 것이다. 또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도 정부는 고령사회 흐름에 역행하는 노동시장 관행을 시정하는 데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3. 고령사회에 대한 국민 인식 높여야

앞서도 언급했지만 우리 국민들의 고령사회, 복지국가에 대한 인식은 일천하다. 연금제도 도입 역사가 짧다보니 대표적인 복지제도의 하나인 국민연금 등 공적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

인구 고령화는 단순한 노후대비 방식 등 경제적 측면에 국한할 수 없는 사회 전반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가족제도와 노동시장, 기업고용 관행은 물론 개인의 삶과 여가 행태에도 변화가 불가피 하다. 이런 점에서 고령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정부 뿐 아니라 기업과 시민단체 등 시민사회의 협조와 공동 노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초중고 교과 과정을 통해 고령사회의 의미와 대응책을 교육하는 것도 필요하다. 고령화가 이미 깊숙이 진행 중인데도 연금제도와 건강보험 등 공적보험에 대한 기본 인식도 없는 성인이 태반인 현실은 향후 고령사회 정책의 효과를 크게 제한할 것이다. 